

100만 광역도시·고교무상교육·새만금 예산 증액

〈정운천 후보〉

〈최형재 후보〉

〈장세환 후보〉

Report

격전지 후보자들 공약 점검 - ②전주을

4·13 제20대 총선의 본선전이 시작됐다. '선거구 재획정', '大野 구도'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이번 선거는 그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이에 본보에서는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후보들의 공약 소개를 통해 정당한 '정책전'을 유도하고자 각 후보별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선거구별 구도와 변수를 알아보자 한다.

/편집자 주

'전주을' 선거구는 제19대 총선의 '전주시 완산구을' 지역의 9개동 중 인후 3동이 제외된 선거구다. 선거구 확정 당시 이 지역 인구수는 216,481명으로 전주시 병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분포한다.

전주시을 후보자는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62),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후보(52),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63), 무소속 성치두 후보(40) 등이다.

최근 종양선거관련위원회에 등록된 이 지역 여론조사별 지지도를 살펴보면 타 지역 대비 여당의 강세로 인한 3강구도를 보인다는 것이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 27일 보도된 전북매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18.0%,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34.3%, 국민의당 28.6%로 기타정당이나 지지정당 없음이 19.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일 새전북신문이 보도한 전주시 정당지지도 새누리당 16.0%, 더민주당 36.3%, 국민의당 30.9%로 기타정당이나 지지정당 없음 16.8%과 거의 같은 분포이다. 하지만 후보별 지지도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 27.3%, 더민주당 최형재 후보 30.0%,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 22.9%, 무소속 성치두 후보 1.8%(3월 27일 전북매일신문) 등을 보여 오차범위 ±3.5%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후보·최후보·장후보가 오차범위 내 3강구도를 보여준다. 또한 지난 29일 전북도민일보 보도내용은 정 후보 29.0%, 최

후보 31.5%, 장 후보 18.7%, 성 후보 3.2%, 무응답 17.7%를 보여 與·野의 2강·1중 구도가 나타난다.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는 정책공약으로 전북 5대 비전과 전주 8대 핵심공약을 내세웠다. 전북 5대비전은 대기업 유치, 기금운용본부 인차 등 경제 관련 비전과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100만 광역도시 전주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전주 8대 핵심공약으로는 ▲삼천천 생태경관조성사업 ▲교육도시 전주 명성의 재회립 ▲효자동 경노종합복지타운(500억) 건립 ▲서신동 복합스포츠센터(150억) ▲자연치유 힐링병원' 건립 등 의료인프라 확충 ▲민원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700여원) ▲용리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을 들고 있다.

정 후보는 경제 분야에 대한 비전제시가 많고 '여당 의원 열명 뉘하는 여당의원'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만큼 국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공약이 주를 이룬다는 특징으로 보여진다. 특히 지난 6년 동안 3번 째 선거에 도전하는 만큼 지역의 바다 민심을 훑을 수 있는 노인복지타운, 의료인프라, 환경 등의 정책공약을 골고루 제시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후보는 시민정치 5대 프로젝트와 국민정치 7대 프로젝트의 정책공약을 통해 지역민심을 달래고 있다. 시민정치 5대 프로젝트는 ▲고교무상교육 실현 등



새누리 정운천 후보



더민주 최형재 후보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



무소속 성치두 후보

삼천천 생태경관 조성
자연치유 힐링병원 건립
용리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어르신 복지·건강 증진
자영업 인턴제 도입
청년 취업활동비 지급
부자 중세·지방권 한화대

중앙인사 전북인재 강화
혁신도시 상생방안 마련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혁신교육특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설립
단독주택 관리소 설치
권역별 보건소 추가

'온 전주가 함께 키우는 이이' ▲자영업 인턴제 도입 등 더 많은 지원으로 풀뿌리에는 상권' ▲청년들의 취업활동비 지급 등의 '일자리와 자립으로 지키는 청년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제2의 삶'을 여는 당당한 어르신' ▲전국 최초 문화예술전문도서관 유허 등이 '공동체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마을' 등이다. 또한 '민생을 쟁기면서 정권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은 7대 프로젝트는 부자 증세 및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확대 하기 위한 입법공약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 후보의 전주시민을 위한 시민정치 5대 프로젝트는 교육·경제·복지·문화 등에 초점을 맞춘 공약과 함께 정권교체와 지방자치에 대한 공약을 통해 지역민심과 여권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교육과 관련

된 공약과 월 60만원씩 6개월간 청년 취업활동비 지급을 통해 청년·중년 층의 표심을 모으는 한편 장년층의 의료비 지원 등 복지 증진을 통해 '어르신 표밭'을 일구고 있다. 선전에 도전하는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는 강한 전북을 위한 ▲지역 예산증액 및 중앙 인사 전북 인재 강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부문 이전원로 ▲새만금특구권 국가예산 증액 확보 ▲혁신도시 상생을 위한 방안과 대책 ▲수도권 규제 강화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 ▲KTX 역사시민 대인화보 등과 공정한 대안민족을 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위원 세비 25% 삭감 ▲자동차세, 유류세 등 서민세금 완화 ▲대기업 법인세 강화 ▲여성 출산·보육 지원법안 정비 ▲청년 일자리 창출 ▲자립 지원 법안 정비 등을 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

장 후보는 국회의원 특권 축소에 대한 공약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문화회관과 전북장애인권센터, 서부지역 보건소, 서부·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등을 건립해 지역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특히 KTX 증편과 경륜장 주변 도시계획 재정비 등 지역현안에 대한 공약도 덧붙였다.

무소속 성 후보는 혁신교육특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 전주를 흥남 최고의 교육문화 특구로 만드는 한편 삼천천을 세내수변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또 원룸과 단독주택 단지 공동주택과 관리소 설치, 권역별 보건소 추가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로 복지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특별취재반

4.13 선거 RUN · RUN · RUN

유성엽 후보 고창연락사무소 개소식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의원 후보(정당 고창)는 30일 고창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길진 전 도의회 의장, 이용환 전 도의원, 유기상 전 도기획실장, 정경교문화연구소장 김경식 박사, 헤피데이 고창 박성학 대표, 전북장애인 배구협회장 김정섭, 경우회 김종인 회장, 고창군 농업인단체 협의회장 조병율, 대한불교 조계종 남산사 주지 도선스님, 고창군 고흥류씨 류택주 종친회장, 국회축제위원회 정원환 위원장, 고창군자체장애인협회 신숙 회장, 이여병 회장 등을 비롯한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유 후보는 '전북 중심의 정권교체의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으로 선거에 임하겠다. 처음 선거에 나서는 것 같은 마음과 자세로 최심으로 돌아가는 힘을 다 해 뛰겠다. 큰 승리를 거두 우리 고장의 자존심을 세대로 확립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다"며 큰 성원과 지지를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김윤태-함운경 후보 단일화 성사 가능성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의 독주체제를 유지해 왔던 군산 지역 선거판이 치열한 접전을 치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의 김윤태 후보와 무소속 한운경 후보의 후보 단일화가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9일 한 후보는 "부표용지가 인쇄되지 전인 4월 4일 이전에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후보를 단일화하자"며 김 후보가 제안하는 어떤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후보(더민주당)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군산부전과 지역 정치 대개혁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권교체, 아관·관·부, 지역 정치개혁을 위해서 한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와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와 한 후보의 연대는 곧바로 구체적인 양상 논의에 들어가 이번 주내로 결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JTBC·MBC·전북도민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95%의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로 새누리당 체 유통 후보가 6.3%, 더민주당 김윤태 후보 24.9%,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 39.5%, 정의당 조준호 후보 5.1%, 무소속 한운경 후보 9.6%를 보였다. 따라서 김 후보와 한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해 그 지지세를 오롯이 흡수 할 경우 34%를 넘어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와 오차범위에 근접하는 접전을 치루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야권연대 동참을

함께 드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은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지역 국민의당 후보들은 인철수 대표의 선거연대 불가론에 대해 입장을 꼭 밝혀야 한다. 수도권 지역 연대 촉구에 함께 동

"대통령 사진이 존영 지금이 여왕시대인가"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대구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30일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역 의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액자와 반납을 요구한 것과 관련, "어떤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시장이라고 하지 않고 존영(尊榮)이라고 한다"며 "지금이 여왕시대인가"라고 꼬집았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달성에 출마하는 더민주 조기석 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 "대구 시민들을 무시하는 새누리당의 오만이 도를 넘었다. 이런 당을 민주적인 공당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진박·비박·진박·탈박·원조박·종박 등 아니 세상에 무슨 박" 종류가 그렇게 많은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그 많은 박 가운데 어떤 박만 대통령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싸우느라 바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 대구시민들이 이를 심판해줘야 한다"며 "우리는 이번 선거는 대구 시민들이 새누리당의 오만을 아파서 정신차리게 하는 회초리 선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새누리당 간판만 있으면 무조건 당선이 된다"며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이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공천 출신들에게만 충성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이 어떻게 대구 시민을 무시하게 됐는가"라며 "3당 합당 이후 30년 가까이 대구 시민들께서 무조건 새누리당만 뽑아준 결과"라며 새인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 더민주가 오래 주장한 경제민주화, 그것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해야 경제 살리고 민생을 살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포항 북구에 출마하는 오종기 후보를 방문하고, 울산을 주군의 정찬모 후보, 울산남구갑 심규명 후보를 차례로 방문, 지원 사격한다.

/이성주기자

송천동 변전소 설치 '괜찮다' vs '반대한다'

〈김성주 후보〉

〈정동영 후보〉

정 후보 "사람 많이 모이는 광화문 네거리에 짓겠다는 것"

김 후보 "정 후보 개발 역설한 에코시티 늦추는 꼴"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전주시병)는 30일 도시가 들어서는 한복판, 현재 35시간 자리에, 3만 5000명의 도시와 기존 도시까지 합침면 10만명이 사는 한복판 광화문네거리에 교보빌딩 자리에 변전소를 짓겠다는 거예요"라고 대답했다.

이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다른 '송천동 변전소' 자리에 대한 의견에 대해 정 후보가 김 후보에게 지적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어 정 후보는 "그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아무 역할도 안 했다? 이것은 비난받아야죠"라며 김 후보를 질타했다.

이에 김 후보는 "그 질문은 정 후보가 3년간 지속되는 버스피업 문제에 대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반문하는 질문입니다"며 "송천동 변전소는 이렇습니다. 지하로 전기가 끼워 지하에서 다시 배분해서 에코시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려고 하면 어떤 인체에 위해성이 있는지 따지면 되는 것

입니다. 그것은 전주시가 용역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데 반대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에코시티 개발을 늦추는 것입니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정동영 후보 스스로 35시간

이전시켜서 에코시티 개발의 주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공급하는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대인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아니면 어떤 자리에 해야 되는지 대안을 얘기해야지, 협력 의원이 왜 그걸 못 막았나하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